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4월 4일 화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도 4일 ‘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 ’ 발대식 개최	1
江原日報	21면	[동정] 권혁열 강원도의장	2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권혁열 강원도의장	2
江原日報	03면	‘ 공감과 혁신으로 새시대를 여는 강원도의회 ’ 의정 슬로건 ...	3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개소	4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개소	4
江原日報	13면	어린 묘목 6,000그루 속초시민 품으로	5
강원도민일보	12면	송정동 단체협의회 환경정화	5
江原日報	15면	8개 읍 · 면 구석구석 새벽부터 북적	6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이기찬(양구) 도의원	6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심오섭 도의원	6
The JoongAng	온라인	김진태, 산불 잇따르는데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 방문	7
강원도민일보	01면	김진태 "강원 반도체공장 유치 포기는 없다"	8
강원도민일보	23면	"산림엑스포 동참 세계인 매료시킬 프로그램 만들 것"	8
江原日報	06면	강원도 예산 증가율 5.72% 제주의 절반	9
江原日報	03면	"강원자치도 과감한 권한 이양 시급" 정치권 지원 사격	10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공공기관 유치전 물밑작업 한창	10
강원도민일보	04면	도교육청 교육특례 '신중검토' 다수에 고심	11
The JoongAng	20A	강릉 벚꽃 · 삼척 유채꽃 · 정선 할미꽃 … 강원도, 꽃을 입었다	12
강원도민일보	05면	춘천 지식산업센터 소통 오류로 사업허가 못받는 업체 속출	12
江原日報	01면	횡성 · 정선 · 평창 · 영월 '소멸 고위험지역' 비상	13
江原日報	15면	“ 강원랜드 폐광기금 소송 즉각 중단하라 ”	14
The JoongAng	08면	이상기후로 사계절 산불 … “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됐...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원도심 주차난 해결 지혜 모아야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원주시 문화예술 '효율성' 잣대 우려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정부, 강원특별자치도에 헛바퀴만 돌리나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ASF 조기 확산 우려, 철통 방역으로 위기 넘겨야	18

江原日報
2023년 04월 03일 (월)
정치

강원도 4일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강원도는 4일 오전 9시40분 도청 앞 광장에서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부의장,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농촌 일손돕기에 힘을 보태기로 결의한다. 발대식 종료 후에는 춘천 서면 아스파라거스 농가를 방문, 아스파라거스 수확 자원봉사를 벌인다.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은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 공무원, 대학, 일반자원봉사자 등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도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2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원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11곳)을 운영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 발대식 및 일손돕기를 통해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04일 (화)
인물동정 21면

◇권혁열강원도의장은 4일 오후 7시30분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개최되는 대관령음악제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4월 03일 (월)
종합

[동정] 권혁열 강원도의장

권혁열 강원도의장은 4일 오후 7시30분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개최되는 대관령음악제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4월 04일 (화)
종합 03면

‘공감과 혁신으로 새시대를 여는 강원도의회’ 의정 슬로건 선정

강원도의회가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맞춰 새롭게 공모한 의정 슬로건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공감과 혁신으로 새시대를 여는 강원도의회’를 선정했다. 강원도의회는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슬로건 및 의정방침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의정 슬로건은 ‘공감과 혁신으로 새시대를 여는 강원도의회’, 의정 방침은 ‘도민과 소통하는 의원, 도민이 공감하는 의정, 도민을 생각하는 의회’다. 우수작은 ‘새로운 강원, 새로운 미래, 함께 여는 강원도의회’, ‘강원을 더 특별하게, 도민을 더 행복하게’ 등이다. 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종합 02면

강원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개소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사무실 이전 개소식이 3일 춘천 퇴계동 한숲캐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 위원장, 최찬호 강원민예총 이사장, 이해규 도예총 부회장, 박주선 도문화원연합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서영

▶관련기사 23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인물 23면

강원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개소

강원문화재단이 춘천 퇴계동 청사로 이전,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분야 성장을 다짐했다.

강원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개소식이 3일 춘천 퇴계동 한숲캐슬에서 열렸다. 김진태 도지사,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 위원장, 최찬호 강원민예총 이사장, 박주선 도문화원연합회장, 이해규 도예총 부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은 고천문(하느님께 아뢰는 글)을 낭독했다. 재단 이사회도 이날 열려 올해 제1차 추경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 한편 재단의 이전 청사인 춘천 KT빌딩에 함께 상주했던 강원민예총도 지난달말 강원국악예술회관으로 사무실 이전을 마쳤다.

김진형

江原日報
2023년 04월 04일 (화)
지역 13면

어린 묘목 6,000그루 속초시민 품으로

본보·시·산림조합 마련 나무 나눠주기 행사 성료
인파에 행사 앞당겨 실시 1인당 2그루씩 전달

◇강원일보와 속초시, 양양속초산림조합이 마련한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3일 엑스포 타워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속초】"행복을 키우듯 잘 심고 잘 가꾸겠습니다."

강원일보와 속초시, 양양속초산림조합이 마련한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3일 엑스포 타워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시민은 아침에 병원에 다녀온 뒤 4시간을 기다렸다가 대추와 매실나무를 받은 뒤 "어디에다가 심어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시는 수많은 시민이 행사장에 몰리면서 오후 2시에 계획된 행사를 10분 앞당겨 시작했다.

이병선 속초시장, 김명길 속초시의장 및 시의원, 원미희·김시성·강정호 도의원, 전도영 양양속초산림조합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나무를 일일이 나눠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시민들에게 나눠 준 나무는 대추, 매실, 밤, 자두, 살구 등 총 5종의 유실수 6,000그루로 1인당 2그루씩이다.

시는 행사가 매년 대형산불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청명·한식 기간에 진행됨에 따라 나무 나눠주기 행사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도 함께 펼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사)속초시산림교육전문가협회가 '숲체험 자연교실' 부스를 운영해 숲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속초의 미래를 심는 것"이라며 "오늘 시민들에게 나눠 준 유실수로 속초를 더욱 더 푸르고 아름답게 가꿔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지역 12면

송정동 단체협의회 환경정화 강릉시 송정동 단체협의회와 최승순 도의원 김영식·박경난·권순민 시의원 등은 3일 하평뜰 일대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04일 (화)
지역 15면

8개 읍·면 구석구석 새벽부터 북적

평창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

묘목 1만3,000그루 배부
지역기관·단체장도 참석

◇평창군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행사가 3일 평창읍 백일홍축제장을 비롯한 7개 읍·면사무소에서 열려 5,000여명의 군민들이 희망의 나무를 받았다.

【평창】"희망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산림수도 평창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평창군과 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군산림조합,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2023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3일 오전 10시 평창읍 백일홍축제장을 비롯해 7개 읍·면사무소에서 각각 열렸다.

평창읍 백일홍축제장에서 개최된 평창읍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는 심재국 평창군수, 지광천 도의원, 이종봉 평창군산림조합장, 김인천 평창국유림관리소장, 조진호 강원일보 평창지사장, 이창열·박춘희 군의원, 허준대 평창읍번영회장, 진윤기 평창읍체육회장과 지역 주민 1,000여명씩이 참가했다.

군이 마련한 자두와 체리 2종 8,000그루와 평창군산림조합이 준비한 민엄나무 2,500그루 등 1만500그루를 8개 읍·면별로, 평창국유림관리소가 준비한 블랙베리 500그루와 마가목 500그루, 소나무 1,500그루 등 2,500그루는 평창읍 백일홍축제장에서 군민들에게 선착순으로 4그루씩 나눠주었다.

황학자(여·74·평창읍 하리)씨는 "오전 6시부터 기다렸다. 자두와 체리, 블랙베리, 민엄나무를 받아 집 앞 마당에 심을 생각인데 나무만 봐도 배부르다"고 했다. 미탄면의 박화자(70)씨는 "매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 때마다 나무를 받아 심었더니 제법 자라 열매도 주고 그늘도 돼 준다. 올해 받은 나무도 정성껏 심고 가꾸겠다"고 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3년 만에 식목일을 맞아 희망의 나무를 나눠주게 돼 기쁘다"며 "어린 묘목을 식재해 잘 가꾸는 것만큼 산불 예방도 중요하다. 봄철 산불에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봉 평창군산림조합장은 "오늘 나눠드린 희망의 나무가 산림수도 평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인천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는 국토 녹화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인 만큼 올해 나눠준 나무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잘 심고 가꿔서 평창을 더욱 푸르게 해주길 바라며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조상원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인물동정 16면

이기찬(양구)도의원은 4일 오전 9시 40분 강원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농업인력지원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인물동정 12면

심오섭 도의원은 4~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리는 2023년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 2차 교육과정에 참석한다.

The JoongAng

2023년 04월 04일 (화)
지역

김진태, 산불 잇따르는데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 방문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식목일을 앞두고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른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강원도청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쯤 춘천 지역의 한 골프연습장을 찾아 30분가량 골프 연습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속초에서 식목일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도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평소 즐겨 찾던 골프연습장으로 향했다.

김 지사가 골프장을 방문했던 날 강원도 곳곳에서는 산불 진화작업이 한창이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화천 산불은 18시간가량 타오른 뒤 이튿날 오전 6시 45분쯤 주불이 잡혔다.

31일 오후 3시 49분쯤엔 홍천에서 산불이 나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헬기 4대, 대원 117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도 산불 지휘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가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도청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연가 신청서는 지난달 31일이 아닌 이달 3일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속초 행사가 일찍 끝나 김 지사가 오늘 일정을 파한다고 얘기했고 비서실장도 그때 조퇴를 했다"며 "그런데 김 지사의 조퇴 일정 기안을 올리는 주무관이 연가라 당일에 처리하지 못하고 오늘 연가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화천 산불이 크게 났다가 점심 때쯤에 완진 보고를 받았고 원주, 홍천도 당시 주불 진화가 완료돼 상황이 끝났다고 보고받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측은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종합 01면

김진태 "강원 반도체공장 유치 포기는 없다"

김 지사, 중단없는 전진 강조
"클러스터 확장 가능성 있어"
민주 도당 공약미이행 사과 요구
"지선 때 부지 적합 검토도 없어"

속보=강원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놓고 강원도와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강원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 1순위로 삼았던 원주 부론산업단지를 포기한 (본지 4월 3일자 1면) 것과 관련, 김진태 지사는 중단없는 전진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공약미이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제 사전에 포기는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 투자계획이 수도권 위주로 발표가 되니까 강원도는 이제 '포기각' (포기 가능성)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 사전에 포기는 없다"고 밝히며 부정 여론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 삼성 반도체, 진짜 하는 거다. 지켜봐달라"며 "정부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원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오히려 삼성 만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3월29일) 삼성 (관계자들)이 도청에 다녀갔는데, (이 자리에서) '생태계 조성이 되면 기업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맨땅에서 꽃을 피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씨앗을 심고 나무를 길러 나가야 한다"며 "씨앗은 반도체 교육센터가 될 수 있고, (반도체 생산) 테스트베드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자만 팔던 강원도는 잊어달라. 우리도 미래산업으로 가보겠다"고 했다.

김 지사의 원주권 1호 공약인 '원주 부론산단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가 대체부지로 조정된 것에 대해 민주당 도당 (위원장 김우영)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약 (公約)이 결국 공약 (空約)이 됐다"며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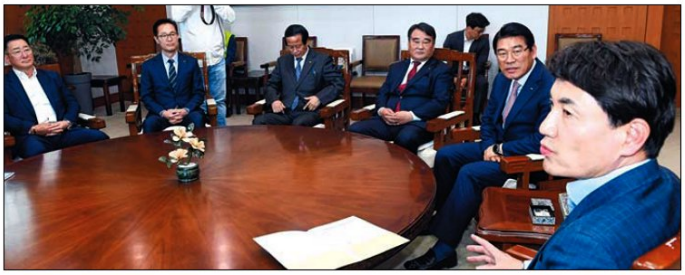
도당은 "지방선거 때는 부론산단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데 적합한지 검토도 하지 않고, 뭍지마 공약을 했다는 말이냐"며 "대체 부지 선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체 부지를 선정하면 용수와 전력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표 날리듯 약속을 해놓고,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공통 공약을 발표한 김 지사를 비롯한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 (원주갑)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설화·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인물 23면

"산림엑스포 동참 세계인 매료시킬 프로그램 만들 것"

산림조합중앙회장·도지사 간담회
세계산림엑스포 협조 방안 논의
김 지사, 도내 산림조합 지원 약속



최창호 산림조합중앙 회장이 3일 강원도청을 방문, 김진태 지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서영

산림조합중앙회가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와 붐업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3일 강원도청을 방문, 통상상담실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동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상임부위원장과 함께 환담을 갖고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 협조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환담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측에서 최 회장을 비롯해 박유봉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협의회장 (홍천군 조합장), 김준기 산림조합중앙회 이사 (영월군 조합장), 박영선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세계산림엑스포라는 국제적인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감하는 게 중요한 만큼 각종 세미나와 전국 대학생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산림조합중앙회 차원에서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도내 산림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림조합원 41만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지원을 위해 △전국 시·도 산림조합원의 날 운영 △산림 조합 자체 행사 진행 △산림지 등온·오프라인 홍보 △외국 산림조합 초청 등을 추진한다.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 간 속초·고성·인제·양양군 일원에서 열린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4월 04일 (화)
경제 06면

강원도 예산 증가율 5.72% 제주의 절반

전국 광역 시도 올 예산 분석

道 7조5,232억원으로 11번째
재정자립도 29.4% 14위 그쳐
세입 예산의 47.4%가 보조금

강원도의 올해 예산 증가율이 제주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도 전국 14위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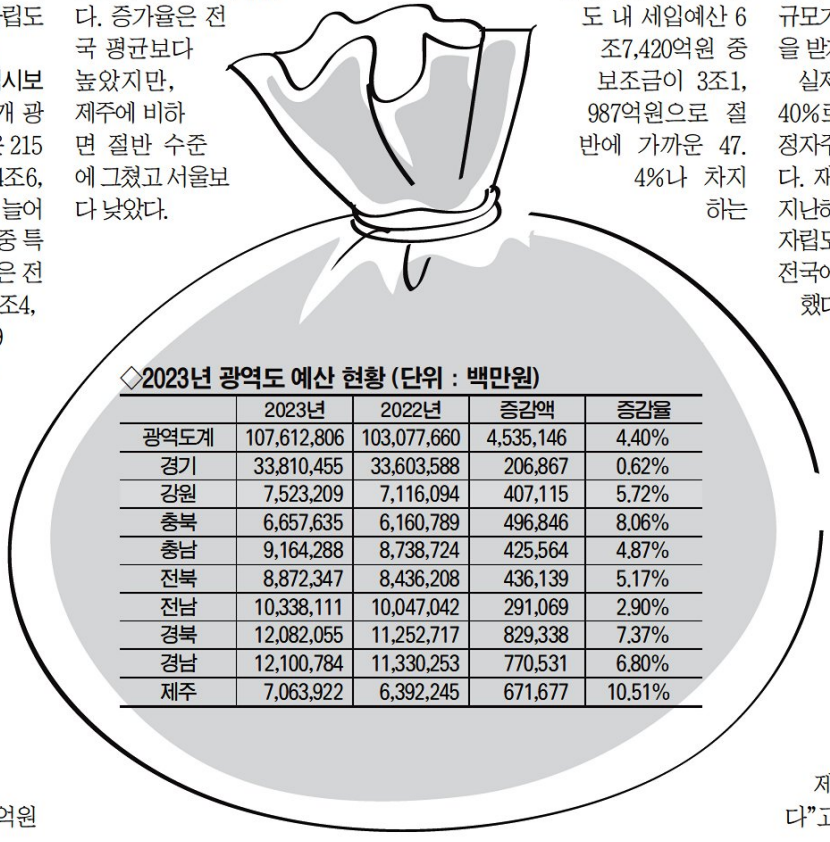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나라살림 브리핑 299호'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자립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광역도 예산 증가율 광역시보다 낮아=브리핑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3년 예산액은 215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204조6,000억원보다 10조5,000억원이 늘어 5.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특별시 등 8개 광역시 지역 예산은 전년 대비 5.87% 늘어난 총 107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9개 광역도 예산은 총 107조6,128억원으로 4.40% 증가에 불과했다.

이에 광역도 지역과 광역시 지역 간 예산 차이는 지난해 1조6,000억원가량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좁혀졌다.

증가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시로 44조원에서 47조원으로 3조원 많아졌으며, 제주도는 전년 대비 10.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강원도는 2022년 7조1,160억원에서 올해 7조5,232억원으로 5.72%(4,071억원) 증액돼 17개 시·도 중 11번째 규모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제주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서울보다 낮았다.



◇2023년 광역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2년	증감액	증감율
광역도계	107,612,806	103,077,660	4,535,146	4.40%
경기	33,810,455	33,603,588	206,867	0.62%
강원	7,523,209	7,116,094	407,115	5.72%
충북	6,657,635	6,160,789	496,846	8.06%
충남	9,164,288	8,738,724	425,564	4.87%
전북	8,872,347	8,436,208	436,139	5.17%
전남	10,338,111	10,047,042	291,069	2.90%
경북	12,082,055	11,252,717	829,338	7.37%
경남	12,100,784	11,330,253	770,531	6.80%
제주	7,063,922	6,392,245	671,677	10.51%

다만 이는 당초예산에 기초를 둔 자료로 추가경정예산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최근 제1회 추경예산 5,321억원을 편성해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 올해도 하위권=지자체별 세입예산의 재원을 살펴보면 올해 강원도 내 세입예산 6조7,420억원 중 보조금이 3조1,987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7.4%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방세가 2조463억 원(30.4%)으로 뒤를 이었고 지방교부세(18.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2.4%), 세외수입(1.2%) 순이었다.

보조금은 대부분 일정한 비율의 대응사업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비중이 높을수록 지자체 가용재원의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29.40%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재정자주도는 48.58%로 전국 11위였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1년 전보다 2.63% 뛰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자치단체별 세외수입의 편차가 매우 크고, 비중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세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외수입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세수 오차 문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세입예산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휘기자 yulnyo@

江原日報
2023년 04월 04일 (화)
종합 03면

“강원자치도 과감한 권한 이양 시급” 정치권 지원 사격

국회 18일 법안소위 심사

노용호 의원 대정부 질문서

“전폭적인 지원” 강력 촉구

한 총리 “규제 과감히 풀 것”

도청 직원들 국회 소통 행보

국회에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6월11일 출범을 앞두고 법안의 ‘알맹이’를 시급하게 채워 넣어야 할 강원도 및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 및 특례 부여 △지원위원회 규정 개정 및 효율적 운영 △4대 규제 우선 해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화 시대 비전과 방향성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준비 기간이 짧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규정에는 중장기적 발전방안,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국무총리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강원도지사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과 산지관리 권한 등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노 의원의 질문에 “정부부처와 협의하면서 강원도를 묶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나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강원도 특별자치국 직원들도 국회를 방문했다. 박용식 국장은 강원도 의원실을 순회하면서 지난달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던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8일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협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박용식 국장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 강원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다음 주엔 정부 부처를 다니면서 다시 한번 강원도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내 한 국회의원은 “개정이 필요한 137개 조문을 분야별로 세분화시켜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부처의 협의를 이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종합 02면

도, 공공기관 유치전 물밑작업 한창

국토부, 관련용역 6~7월쯤 마무리

목표 기관과 이전 의사 타진 총력

속보=‘공공기관 이전 시즌2’ 프로젝트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의 유치전(본지 1월31일자 1면)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전에 나서면서 조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역별로 유치 희망기관이 겹칠 경우엔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따른 지역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정부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건설이 아닌 원도심으로도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로 해 기존 혁신도시와 비(非)혁신도시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용역을 6월 말이나 늦어도 7월 중에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국토부 업무보고 등에서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360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겨냥한 각 지자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강원도는 한국은행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코레일유통, 대한체육회, 국방연구원 등 32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도는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단을 최근 구성했으며, ‘공공기관 이전위치 자문단’을 발족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에 바짝 나섰다.

또, 유치 목표로 삼은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의사를 타진하며 강원도 이전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는 복안이어서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맞물려 강원도 유치 공공기관 규모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6월 발표될 국토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부 균형발전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이전 방식이 정해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종합 04면

도교육청 교육특례 '신중검토' 다수에 고심

교육자치조직권·국제학교 설립 등

전부개정안 반영 절반 정부 입장차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자치 강화 등을위해 추진하는 교육특례 중 상당 부분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보여 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있다.

강원도교육청은 3일 오전 신경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교육분야 특례 보고회'를 열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특례 14개 중 8개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됐으며 나머지 6개는 미반영된 상태다.

문제는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특례 8개 중 4개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과 교육자치조직권, 국제학교 설립,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례다.

해당 특례 모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지원위원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강원도지사로만 한정돼 있어 사무의견 제출 특례를 적용하면 강원도교육감도 직접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역시 인사·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강원도 여건에 맞게 보조기관과 교육지원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강원자치도지사로, 강원자치도지사를 통해서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고 강원자치도지사와 강원자치도교육감이 상이한 사항을 부의할 경우 행정적 비효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교육감 부의권이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추후 개정안 발의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jho@kado.net

The JoongAng
2023년 04월 04일 (화)
충청/강원 20A면

강릉 벚꽃·삼척 유채꽃·정선 할미꽃 … 강원도, 꽃을 입었다

경포벚꽃 축제 내일까지 열려
삼척 맹방 유채축제 7일 개막
정선 동강할미꽃 행사 2일 폐막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시 저동 경포호. '따뜻한 3월'에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만개해 있었다. 이날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박모(70·여)씨는 "이번 주에 벚꽃이 활짝 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며 "오랜만에 예쁜 벚꽃을 보니 참 좋다"고 말했다.

경포호 일원에선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2023 경포벚꽃 축제'가 이어진다. 4년 만의 행사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열리지 못했다. 모처럼 준비한 행사지만 벚꽃 개화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한때 혼란이 빚어졌다. 애초엔 축제를 4월 4~9일 열 계획이었으나 나흘 앞으로 당겼다.

강원 강릉시 경포호 주변 길에 벚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이 나들이를 나온 모습. [중앙포토]

이번 축제는 '경포, 벚꽃에 물들다'가 주제다.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 바다와 호수도 감상할 수 있다.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 강릉을 대표하는 여행 테마를 그린 일러스트, 청년작가들의 벚꽃엽서, 벚꽃 그림으로 구성된 시화 등이 전시된다. 경포 습지광장에서는 1~2일 '벚꽃 운동회'가 열려 가족 단위 관광객이 팀보와 줄다리기, 물풍선 던지기 등을 즐겼다.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포의 벚꽃을 마음껏 즐기지 못해 아쉬워했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호수와 바다가 공존하는 강릉 경포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유채꽃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던 강원 삼척시도 올해 바다와 벚꽃, 유채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삼척 맹방 유채꽃축제를 연다. '삼척 맹방 유채꽃과 봄 가득 희망 가득'을 주제로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는 근덕면 상맹방리 일대 6.8ha의 유채밭은 노란 유채꽃으로 물들어 있다. 여기에 국도 7호선을 따라 늘어선 벚꽃과 푸른 바다까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삼척맹방유채꽃축제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축제는 농축특산물 판매장, 향토 먹거리 장터, 라디오 공개방송 등 행사로 진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바다, 유채꽃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벚꽃과 유채꽃 말고도 봄을 맞은 강원도는 '옷'을 갈아입었다. 정선 동강할미꽃 축제도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동강할미꽃거리와 생태체험학습장 일대에서 열렸다. 동강할미꽃보존회와 정선읍 문화체육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동강할미꽃 시서화 대전 인문학에 취하다'다.

국내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인 동강할미꽃은 1997년 발견됐다. 이른 봄에 흰색, 보라색, 자색, 남색의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귤암리 일대는 동강할미꽃 대표 군락지 중 한 곳이다. 축제장에선 거리공연과 목공에 화분 제작, 할미꽃 심기, 생태 공예 체험, 보물찾기, 공모전 그림 전시 등이 펼쳐졌다. 올해는 동강할미꽃을 주제로 한 초등학생 사생대회와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시 짓기 공모전도 열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사회 05면

춘천 지식산업센터 소통 오류로 사업허가 못받는 업체 속출

시 '입주 활성화' 부분임대로 제한
분양자 전체임대 20곳 허가 불발
업체 측, 시 방문 대책마련 촉구
시 "분양사무소에 내용 전달 지속"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된 후평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가 임대 가능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산업체 입주 활성화를 위해 전체 임대업은 제한, 부분적으로 임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공간을 전체 임대하면서 임차 업체가 춘천시의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 후평산업단지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한 건물에 여러 작업장과 판매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연면적 5만 7140㎡ 규모로 민간 자본 490억원이 투입, 지난해 5월 준공해 현재 운영 중이다.

문제는 임대 가능 여부다. 춘천 후평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춘천시는 일부 유휴부지 임대만 가능하도록 하고 공간 전체에 대해서는 임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분양 받은 공간 전체를 임대하면서 임대업체가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춘천시는 현재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약 20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임대를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업체 측은 최근 춘천시를 방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타 지역의 경우 분양 후 개인간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사무소 측은 지난달 대행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안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사무소 측 관계자는 "대행사가 바뀌기 전 사업개시 후 임대를 하거나 일부 유휴부지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 공간 대부분이 99㎡(약 30평) 안팎으로 좁아 일부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춘천시는 임차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에 한정해 임대업 업종코드가 가능하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강원도에 변경을 요청했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일부 분양자들도 충분히 안내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며 "강원도내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는 과정이다보니 일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분양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훈

江原日報
2023년 04월 04일 (화)
종합 01면

횡성·정선·평창·영월 '소멸 고위험지역' 비상

읍면동 194곳 중 154곳 고위험
"일자리 격차로 청년인구 유출"

지난해 소멸위험 초기 단계였던 횡성, 정선, 평창, 영월 등 도내 4개 자치단체가 올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떨어졌다. 4개 지자체의 가임 여성인구가 고령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내 시·군의 인구소멸 현실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2023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 '진입지역'으로 분류됐던 도내 16개 시·군 중 횡성(0.186), 정선(0.189), 평창(0.189), 영월(0.192) 등 4개 지자체가 올해 소멸 '고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강원도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에서 6곳이 올해 가임기 여성인구가 고령층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신규 진입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도내 16개 지자체에서 20~39세 청년인구가 순유출됐다. 특히 고성(-30.0%), 영월(-29.5%), 태백(-28.8%), 삼척(-28.7%), 화천(-25.9%)은 청년 순유입률 하위지역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도내 18개 시·군 모두 1년 전보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하락했다는 점이다. 비교적 저위험지역인 원주가 도내 가장 많은 0.052포인트 떨어졌고 춘천도 0.032포인트 하락해 뒤를 이었다. 타 지역도 모두 0.01~0.03포인트 낮아지면서 태백, 삼척, 홍천, 고성, 양양 등 5곳은 0.2~0.3 미만에 위치, 내년에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읍면동별로 보면 올해 강원도내 194개 읍면동 중 154곳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일자리 기회와 일자리 질의 격차가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동휘기자

江原日報
2023년 04월 04일 (화)
지역 15면

"강원랜드 폐광기금 소송 즉각 중단하라"

영월지역 사회단체 성명

【영월】속보=영월군번영회 등 지역 사회단체가 강원랜드에게 폐광기금 소송의 즉각적인 중단(본보 3월8일자 2면 보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번영회와 군이장연합회, 군여성단체협의회, 영월중·공고동문회, 영월청년회의소 등은 3일 성명서를 내고 "강원랜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폐광지역의 현실과 상생 발전을 위해 폐광기금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설립 취지 등 폐광지역의 현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와 폐광지역이 소송에서 패소해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1,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환급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기반시설, 교육·문화, 관광 진흥 등 주요 사업들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언섭 군 번영회장은 "강원랜드는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 또는 합의 조정하고 폐광지역과 같이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든든하고 진정성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폐광지역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윤석기자

The JoongAng
2023년 04월 04일 (화)
사회 08면

이상기후로 사계절 산불…"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됐다"

건조한 날씨 계속, 여름·겨울 안가려
산림재난실장 "규모 크고 기간 길어
인력 미리 배치했지만 진화 애먹어"
관건은 오늘부터 내릴 비의 양

지난 2일 서울 인왕산과 대전, 충남 홍성·보령·당진 등 34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 중 일부가 여전히 진화 중이다. 하루에 발생한 산불 건수로는 2002년 4월 5일(63건), 2000년 4월 5일(50건)에 이어 역대 셋째로 많았다. 3일에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전국 11곳에서 산불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9곳은 진화가 완료됐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2012년 197건이었던 산불 발생 건수는 2021년 349건으로 불었다. 2019년·2020년에는 600건이 넘었다. 평균 산불 피해 면적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엔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에서 산불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2만923㏊) 산불 피해를 냈다.

산불 시기도 다양해졌다. 전체 산불의 약 60%가 봄철(3~5월)에 발생하지만, 최근엔 여름·겨울도 가리지 않는다. 2010~2013년에는 7월에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엔 7월 산불이 연평균 8회씩 발생했다. '지각 장마'나 '마른장마'가 빈번해지면서다.

이번에도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 건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숲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면서 서쪽 지역을 더 덥고 메마르게 했다. 이에 서울과 대전 등 중부지방 곳곳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졌다. 여기에 봄꽃 나들이객이 증가하면서 실화에 따른 산불 위험도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

김창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 규모가 커지고, 산불 기간은 길어지고, 산불 면적은 넓어졌다"며 "과거에는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으로 진화 인력을 미리 전진 배치했지만 지금은 전국 곳곳이 언제 어디서 산불이 날지 모르는 '화약고' 상태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관건은 4일부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느냐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밤부터 6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 남해안·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남부는 120㎜ 이상, 제주도 산지는 200㎜ 이상에 이르는 등 봄비치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충남·전북·경북 북부 내륙·경남에는 20~6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번 봄비가) 산불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산불이 난 지역을 중심으로론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천권필 기자
khkim@joongang.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사설/칼럼 19면

원도심 주차난 해결 지혜 모아야

-상권 침체 주요 원인, 지자체 대책 마련을

춘천·원주·강릉 등 빅 3 도시를 비롯해 도내 원도심 상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생상가가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데다, 온라인 쇼핑 등 소비 성향도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도심상권이 침체하는 큰 이유로 주차 공간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당수가 자동차로 이동하고, 물품을 운반하지만 구도심은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대형 할인매장을 찾는 것도 주차장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도심상권 활성화의 열쇠는 주차 시설 마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도심 주차 환경은 열악합니다. 관공서 주차장은 직원과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도로변 주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 면적도 넉넉지 않아 도심 진입하는 차들은 자리를 찾아 헤매기 일쑤입니다. 도심과 연결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제품 가격이 마트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주차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기존상가도 주변부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도심 상권 침체 상황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춘천의 경우 각종 기관이 밀집한 요선동과 명동,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원도심은 주차장 부족 현상이 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원주 원도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강릉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상가도 주차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릉시민들은 KTX 강릉선 개통으로 관광객이 늘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심 교통 및 주차난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심 주차장 확보가 현안으로 떠오르자 원주시는 도심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캠핑카·카라반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중앙동 문화의 거리 일원 1650㎡ 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때 상권을 주도했던 원도심이 회생하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싼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주차 타워 건립과 지하 공간 활용 등 아이디어를 놓고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도심 상권 활성화는 지역 경제 회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04일 (화)
사설/칼럼 19면

원주시 문화예술 '효율성' 잣대 우려

-민간 전문성 및 문화특수성 존중 협의 우선돼야

원주시에서 시민 주도형으로 추진돼 온 문화도시사업을 비롯한 한지문화 콘텐츠, 아카데미극장 활용 등 여러 문화산업을 일거에 교체하다시피 하고 있어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교체 내지 폐기 이유로 비효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종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문화산업과 문화예술에 '효율성'이라는 잣대가 가장 우선 고려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나옵니다. 원주시가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측과 충분한 의견 수렴 내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협의 조정 방식이 아닌 지시와 감독 등 일방적인 통제에 나서는 인상으로 비치고 있어서 심각합니다.

원주시민들은 일찌감치 박경리 생가 보존운동을 벌여 박경리문학의집을 비롯한 생가 일대를 전국적인 명소로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 노력이 중앙정부 인정을 받아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 국비 지원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원주 도심 공간을 대표하고, 문화를 상징할만한 가치로 커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또한 한지 공예의 으뜸재료인 원주한지 생산 기술 및 이를 둘러싼 콘텐츠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은 원주지역 문화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민 스스로 박경리, 한지, 극장, 옻칠 등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기 때문입니다. 원주한지와 옻칠공예 장인 문화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로 보호되는 성과를 얻어낸 것도 바로 시민과 문화계 민간 역량 덕분입니다. 현행 문화도시사업은 주민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이어서 권장할 일이지 폐기해야할 문제점이 아닙니다. 행정의 힘으로 몰아붙인다면 민간의 문화예술역량이 침체하고 낙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합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역할과 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산업단지는 늘어나는데 여가 및 문화활동이 취약한 도심 불균형 현상으로 도시 기능 전반이 약화하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잠재력이 높은 젊은 층에서는 삶의 질과 여가를 좌우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욕구에 민감합니다. 관료와 행정이 주도하는 문화란 생명력이 길 수도 없고 왕성하게 뻗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원주시는 문화행정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비전문성 탓에 오히려 민간 문화역량을 침체한 측면은 없는지 함께 살펴 민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접점을 찾아내야 옳습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04일 (화)
사설/칼럼 19면

정부, 강원특별자치도에 헛바퀴만 돌리나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건가. 강원도의 요구 사항에 계속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공을 거둔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학교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큰 성과를 내 강원도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특례 중 하나다. 이러한 특례가 관철되지 않으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속 빈 강정이 되고 만다.

> 국제학교 설립 아직은 '시기상조' 입장
> 지원위원회 회의에는 장관급 3명만 참석
> 강원도 보다 절박하게 움직여야 할 때

이제는 교육이 중요한 시대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첨단산업은 물론이고 관광도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그와 관련된 교육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 "교육 문제가 지방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교육이 그 중심이라는 얘기다. 강원도가 국제학교 설립에 애착을 갖는 이유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강원도청에서 회의를 가졌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 장차관급 부처의 장(長)이 위원이지만 실제 이날 참석한 장관급은 3명에 불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장관들을 1대1로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특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지원 약속에도 불구,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강원특별법 특례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처 장관 대부분이 불참해 의미가 일부 퇴색됐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날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외에 지원위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장관급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3명뿐이다. 차관급인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포함해도 정부 위원 20명 중 부처장은 7명으로 참석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강원도는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만다. 강원도는 절박하게 움직여야 한다. 제주도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지만 핵심 권한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법 개정도 출범 초와 달리 점점 국회의 문턱을 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제주의 2단계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이 9개월 걸렸지만 6단계 개선은 3년2개월이나 소요됐다. 최근 제도 개선의 과정은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권한 이관도 단계에 묶여 적시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는 탓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동력이 살아 있는 지금에 더욱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04일 (화)
사설/칼럼 19면

ASF 조기 확산 우려, 철통 방역으로 위기 넘겨야

〈아프리카돼지열병〉

올 들어 평년보다 빠르게 기온이 오르면서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는 올 3월까지 철원과 양양지역 농장에서 ASF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5월에 홍천 농장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왔다. 발생 시기가 전년보다 4개월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더욱이 올해는 2019년 ASF 국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철원, 양양 등에서 겨울철 ASF 사례까지 보고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철원·화천 인접 지역인 경기 포천의 확진 판정 소식에 지역 농가들은 또 뚫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ASF의 재앙을 막는 길은 현재로선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확실히 차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비책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자 ASF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운용할 계획을 발표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민통초소 사이에 군 제독차 15대, 초소와 민통선 남쪽지역에 방역차 12대를 투입해 소독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 포천 농장 확진 사례에 따라 철원, 화천 등 인접해 있는 시·군의 소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잠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3월부터 5월까지 멧돼지 출산기가 이어지는 점, 도내 DMZ 인근 접경지역에서 발견되는 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점 등은 위험 요인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의심 증상은 바로 신고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방역 당국 등은 강력한 초동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은 축산 기반을 뒤흔들고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 2010년 구제역 파동 때는 전국적으로 무려 350만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돼 3조원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당시 도내 돼지 살처분·매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체 사육 마릿수 가운데 절반이 넘게 살처분됐다. 철원군의 경우 90%가 넘는 돼지가 사라졌다. 도내 축산업의 뿌리가 흔들리며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ASF의 감염 대가는 더 참담하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양돈농가에서는 방역망이 뚫리면 심각한 재앙이 덮친다는 점을 명심해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농가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물가 상승 여파가 커지고 있는 이때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철통같은 차단 방역으로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